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1894년 1월 10일 정봉준은 1000여 명의 농민들과 함께 고부 관아로 쳐들어가 군수 조병갑을 쫓아냈다. 갑오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었다. 농민군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즉 나라일을 도와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로 다짐하였다. 같은 해 4월 27일에는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성도 농민군에게 함락되었다. 겁에 질린 조정은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실수였다. 청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 전쟁을 벌였고, 승기를 잡은 일본은 경북공까지 무력 점령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이 강화되자, 농민군은 다시 일어섰다. 기다렸다는 듯, 일본군은 관군을 앞세워 농민군을 공격했다.

## 기고



고영하 조선이공대학교 기계설계과 교수

여러 대학에서 총장선거를 놓고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같은 마당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 교류와 소통을 통해 쪽집이는 걸러지고 모험이는 다듬어져 마침내 누구나 수긍하는 반듯한 결론에 합의하는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된 민주주의다.

요즘에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장·단점을 놓고 각기 제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을 내놓는데, 역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꽃은 직접선거가 아닐까 한다.

물론, 어떤 선거를 지르다보면 종종 항을 제공하거나 파벌을 조정하는 등 갖가지 폐호도 조직을 파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몇몇 대학이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

## 의료칼럼



신승렬 광주 우리들병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목과 어깨 부위 통증으로 진료한 사람은 5년 전보다 30% 정도 늘어나 2012년에는 280여만 명이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목 디스크 환자는 2006년 53만4279명에서 2010년 69만84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목과 어깨 부위 통증 또는 목 디스크가 현대인에게 흔한 질환이 된 것은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잘못된 자세로 경추를 혹사시키는 일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 동학농민운동, 선부는 '개방정책'이 문제였다

안타깝게도 우리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꺾이고 말았다. 1894년, 소위 '토벌작전'에 참가한 일본군은 2만~5만 명의 농민군을 처형하였다. 농민군의 10분의 1쯤이 외국 군대에게 목숨을 잃자, 농민군은 재기 불능이 되어버렸다.

고종을 비롯한 위정자들도 타격을 받았다. 의회에 의존해 농민군을 탄압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듬해 4월 17일, 청일 양국은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에서 강화조약을 맺고, 청일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승전국 일본은 전쟁 배상금으로 은화 2억 냥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청나라에서 받아냈다. 당시 일본의 수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이를 군비 확장에 쓸 여력은 일본은, 군국주의의 길에 깊이 빠져들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농업기술이 점차 발달한 결과, 농촌사회가 분화되었기 때문이다. 토지가 대지주의 수중에 집중되어 사회가 불안해졌다는 말이다. 둘째, 전정(田政, 군정(軍政) 및 환곡(還穀) 등 수취체제에 모순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셋째, 19세기 이후 본격화된 세도정치로 인해 부패가 만연한 것도 이유라 한다.

내가 보기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도 있었다. 동학농민운동의 진원지 전라도의 경우, 농민의 처지는 더욱 열악했다. 그들은 국가재정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전라도는 양반들까지도 오랫동안 권력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상하 계층 모두가 조정에 등을 돌리기 쉬웠다.

다른 문제들도 있었다. 1876년 일본과 불평등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을 통해 값싼 면직물과 공산품을 들여왔다. 임오군란(1882년) 뒤로는 청나라 상인들까지 몰려들어 공산품 시장이 더욱 커졌다. 소수의 객주와 보부상은 이익을 얻었지만, 전통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에게는 타격이 컸다.

가내수공업을 통해 가계 적자를 메우던 농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쌀과 광 등 국내산 곡물의 유통이었다. 쌀이 빠른 지주들은 곡물 수출을 통해 배라부자가 되기를 꿈꾸었다. 그러나 일부 자영농을 포함한 대다수 농민들은 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위기에 빠졌다.

한 마디로, 동학농민운동을 촉발한 것은 조정의 무분별한 무역 개방 조치였다. 고종과 그의 측근들이 주도한 '개화정책'이 화근이었다.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개

화정책을 편 것은 옳았지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거듭된 재정 부족은 매번 중세 조자로 이어져, 농민들은 허리를 펴지 못했다.

농민군이 '척왜양장(斥倭洋僑)'을 외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외세는 정치적 주권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다.

사태의 본질을 파악한 농민군은 '서울의 권귀(權貴)'와 '횡포한 지방 양반' 모두를 적으로 간주했다. 기득권 세력을 농민들은 배신자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남에게 주권을 팔아먹은 죄인이었다. 농민들의 현실인식은 날카로웠다.

무분별한 시장 개방은 늘 사회문제를 낳는다. 1997년의 외환위기도 외환시장 개를 함부로 개방해 각국의 투기자본을 끌어들인 결과였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공산품 수출을 늘이려고 농수산물 수입시장을 열어젖혔지만, 그 폐해가 심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FTA)'들 또한 부작용의 염려가 있다. 빈사상태에 빠진 농촌은 물론, 도시의 중산층도 자칫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이다.

# 대학 총장선거 이대로 좋은가

하기도 했다. 물론, 대학이 충분한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내린 결정이겠으나, 나는 이같은 대학의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는 대학의 규모, 문화 등에 따라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이 쉽지 않은 비교적 큰 집단에서도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직접선거를 고집하는 데는 그만의 장점이 존재할 터, 더군다나 조그마한 100여명 미만의 집단에서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임후보자 개개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질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선거의 단점을 들어 간접선거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 지성인 대학사회에서조차 민주주의 꽃인 직접선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간접선거로 몰고 가는 것은 그동안 누려왔던 권위를 내려놓고, 리더 배양이라는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임후보한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해야며 부대끼는 역사에 해답이 있다.

최근 규모가 큰 대학 총장선거에서 간접선거를 도입하지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간접

선거를 추진하게 되면 추진하는 집단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집단이 구성원 내부에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이해관계와 사적인 인간관계로, 임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후보간 치열한 경쟁 속에 왜곡되어 올바른 투표를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물며 임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원이 간접선거를 추진하면서 임후보자에 대한 면접과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평가위원이 아무리 명석한 두뇌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도 불구하고 직접선거의 단점을 들어 간접선거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편다.

사립대학에서는 총장에 대한 임명권을 이사회에서 갖고 있다. 임명권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직접선거든 간접선거를 통해서 결정할 복수의 후보들 중에서 최종 한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대학의 총장 선거의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관장해서 규정을 만들고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등, 매사에 개입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사람이 조금 과하다는 쪽으로 좋게

보려해도 좀 지나쳐 보일 수도 있다. 총장선거는 그 대학의 선장을 뽑는 일로 아주 중대한 일이다. 이사회에서는 직접선거든 간접선거든 커다란 카테고리만 정해주고,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규정도 만들고 선거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자 순위를 정해서 이사회에 추천하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면 타당하지 않겠는가.

대학 총장선거가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구성원들의 입장이 대변되지 못하고, 몇몇 외부의 임과 정치적 권모술수를 도입하여 이루어진다면 그 대학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점점 쇠퇴하고 쇠락할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중국에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지도 모른다.

침몰하는 세월호를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저 혼자 실컷했다고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 행태에 분노하고, 차가운 바다 밑에 가라앉은 꽃송이들 이들을 애처롭게 매아리 없는 허공에 외치면서, 대학의 선장을 뽑는 행위의 소중함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 길 위의 '안전 불감증'...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바다 위뿐만 아니라 길 위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1명으로 OECD 평균 1.4명에 비해 3배나 높다.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아무렇지 않게 하는 무단횡단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알아서 비켜가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보행자는 '자동차가 멈출것지'라는 생각을 하다 사고가 난다.

운전자의 조심성이 필요하지만 보행자

도 그에 못지 않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지켜야할 점이 있다. 바로 횡단보도나 육교 등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단횡단을 해서 차량 운전자가 발견을 할 경우 자동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 충돌 위험성이 크다.

더욱이 아간에는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높다. 어두워서 운전자의 시야에 안 보이고 보행자 신호나 횡단보도가 아니면 운전자는 무단 보행

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길을 걷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어폰을 귀에 꼽고 있다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은 노력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길 위에서의 안전의식을 되찾아야 할 때다. **▲이만호·광주 서구 치평동**

## 社說

# 검·경 비웃는 유명언 도주 바라만 볼텐가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10일부터 광주지법에서 시작됐지만 실소유주인 유명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에 나섰지 20일이 넘도록 정확한 소재 파악도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유씨는 사건 발생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머무르다가 지난달 초 순천으로 내려갔다. 추적에 나선 검찰은 그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된 순천 일대에 총출동 수색망을 구축하고 차량 검문 검색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유씨가 목포와 해남 쪽에 숨어든 정황이 드러났다. 금수원에 이어 검·경의 포위망이 또다시 뚫린 셈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인력을 동원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그 폐해가 심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FTA)'들 또한 부작용의 염려가 있다. 빈사상태에 빠진 농촌은 물론, 도시의 중산층도 자칫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지자체 선거 관련 '보복·보은인사' 안 된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공직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수장(首長)이 바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좌불안석(坐不安席)에 있다고 한다. 향후 돌아다칠 인사 태풍에서 불이익을 우려한 때문이다.

광주·전남 지자체에선 벌써부터 대폭적인 '물갈이' 설이 나돌고, 새 단체장에게 줄을 대기 위해 혈안이 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특정 공무원들이 당선자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후보자를 지지했다며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선거 후 공직사회의 물갈이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능력있는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혁과 변화를 이루는 것은 지역민의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거를 빌미로 한 보복·보은인사는 조직은 물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 뿐이다. 과거 선거가 끝나고 단체장이 바뀌면 의례 편 가르기와 정실인사

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공직자의 출사기를 강요하는 악순환을 낳았고, 공직과 지역사회의 폐단이 대물림되다. 따라서 단체장은 취임과 동시에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 능력과 화합을 중시한 인사를 해야 한다. 물론 일보다 태생기에 능한 공직자는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하지만 이도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역별로 박빙의 승부가 많았던 만큼 당선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포용과 소통의 행정을 펴야 한다.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독선과 독주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지자와 반대세력 모두를 포용하고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인사가 만사"라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린다면 단체장 자신과 그 지역도 불행한 일이다. 민선 6기 지방자치에서는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실력과 능력, 화합을 존중하는 인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無等鼓

TV의 광고에 나오는 김보성의 '의리'는 요즘 가장 뜨거운 유행어다. 가히 '의리 신드롬'이라 할 만큼 화제가 되고 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밧도 끝도 없이 '으~리' '으리~' 를 외쳐대는 김보성. 그를 내세운 각종 CF로 인해 해당 상품은 매출이 40% 가까운 신장률을 기록하며 소위 대박을 기록했다고 한다. "우리 몸에 대한 의리, 신토부으리~" 김보성의 '의리'를 유행어로 만들어준 음료 광고가 대표적이다. 연에게 대표적 의리남으로 통하는 김

기장 먼저 '사랑의 열매' 측에 성공으로 1000만 원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액수를 떠나 그의 선행은 신선했으며 다소 의외였다. 보종과 주식 투자 실패에 사업 부진으로 가정 경제가 극히 어려웠지만 '은혜 대출을 받아서' 기부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보성의 1000만 원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기부로 이어졌다.

## 의리 신드롬

김보성은 한때 청춘스타였고, '투깝스2'라는 영화로 땃지만 이후 주인공은 커녕 변변한 고정프로 하나 맡지 못한 채 지내야 했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강조하는 '의리' 때문에 '비호감'으로 비치기까지 했다. 김보성의 캐릭터 '의리'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은 광고도 광고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그의 행보 때문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김수현·전지현 등 수많은 스타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기 전

결코 이미지 관리나 등에 떠밀려 한 기부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동안 그가 장소 불문, 장르 불문, TV에 나와서 외쳐왔던 의리에 대한 마음의 떨림을 대중들이 공감하게 된 것이다.

김보성이 외쳐대는 의리(義理)는 사랑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바른 처세를 말한다. 시대를 투영하는 광고 속 유행어는 정곡을 찌르는 촌철살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리'는 인기 있는 유행어가 아닌 극단적 이기주의와 불공정한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kwangju.co.kr

<p>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경 영 적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